

한전공대 특별법 '18일 분수령'...추가 심의 관건

18일 의결해야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
이달 중 법안 공표되면 내년 3월 정상개교 탄력

여당이 삼고초려를 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상정이 무산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오는 18일 '법안 상정'의 분수령을 맞게 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해당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여야 의원 간 찬반토론을 겸한 심의를 30분 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3월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는 11·16일 두 차례 더 한전공대 특별법 심의를 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상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의 안건 상정은 여야가 협치 정신을 발휘해 법안이 소위원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두 차례 심의는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 문턱을 넘어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국회 본회의 표결→정부 전달→3월 공표' 순으로 속도를 내게 된다.

하지만 3월에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도 차질을 빚게 돼 내년 3월 정상 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

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4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앞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계속 공회전을 거듭하자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민지원위'는 '야당이 지역 특혜 프레임 씌워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원위는 한전공대와 비교 대상이 되는 울산과학기술원 설립 당시 울산지역 유일의 여당 의원이었던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나타났던 사례를 들며 야당이 '호남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

3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2050 전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탄소중립을 염원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탄소중립을 염원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9200만톤 줄인다

탄소중립 비전 선포...청정에너지 등 4대 전략 추진

전남도는 3월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목표로 2050 전남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탄소중립은 인간 등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축하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CO2는 흡수해 실질적인 CO2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

개념이다.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청정 에너지·산업·생활·산림을 4대 핵심전략으로 삼고, 2017년 기준 전남의 탄소 배출량 9200만 t을 2030년 까지 30.5%(2800만t)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비전

을 제시했다.

부문별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2600만t,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부문 3600만t,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으로 400만t, 농수축산 스마트화로 200만t, 2050년까지 나무 5억 그루 이상 심기로 2400만t 감축 등을 실천한다.

전남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사냥꾼 운동, 탄소포인트제 가입, 대중교통 이용, 장바구니 사용 등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4대 핵심전략의 10대 과제, 102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75조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핵심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한다.

또 온실가스 관리를 총괄하는 관

리센터도 설립하고, 탄소중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미래 녹색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가칭 국립 그린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후변화 대응기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일상 속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탄소중립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남 기자

광주 백신 1단계 접종 50%↑
이상 증세 5명 '호전'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 가동

광주 지역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 반응을 호소한 5명은 모두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7.8%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까지 1분기 대상자 1만1997명 중 6935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요양병원의 경우 총 66개소 접종 대상자 8870명 중 6370명이 접종을 마쳤다. 접종률은 71.8%다.

백신을 맞은 접종자 중 발열 등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3명이었으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시설은 총 83개소 2087명 중 559명(26.8%)에 대해 1차 접종이 완료, 이 중 2명이 이상 반응을 보였으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접종 대상자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접종 속도를 조정하고 있다. 다음주 중 접종을 마칠 전망이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 1040명 중 현재 6명이 접종을 마쳤다. 이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가 아닌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에 설치된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도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권역예방접종센터 내일 접종은 이달 9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계획 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지에 백신을 배송해 자체 접종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다. ▶관련기사 13면

권역예방접종센터 관련 접종 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의료진 및 종사자로서 4732명이다. 구체적인 지역별로는 광주 1040명, 전남 778명, 전북 1105명, 제주 1809명 등이다. /한동주 기자

평동도시개발 협상대상자 선정 2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3면

청년고용 지원 나선다 4면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오고 새들이 지저귓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